

# KTL, 충전기 인니 수출길 열어 국내 시험으로 'SNI 취득' 가능

비용·기간 줄여 수출 경쟁력 강화  
165억 인종기반 구축사업 성과  
아시아 시험인증 상호인정 기대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들이 복잡한 현지 시험 절차 없이도 인도네시아 수출 필수 인증인 'SNI'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수코핀도(PT.SUCOFINDO)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 분야 강제인증(SNI) 획득을 위한 국내 시험 수행 자격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수코핀도 본사에서 체결된 양 기관 간 시험·인증 협력 협약(Cooperation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로 전기차 충전기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제품 시료를 현지로 보내 직접 시험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KTL이 국내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식 인정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KTL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강제 인증제도(SNI)를 운영 중이며, 관련 제품은 이 인증을 획득해야만 현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KTL은 최신 규제 동향을 신



수코핀도 다니 프라만티오(Dani Pramantyo) 부사장(좌)과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이 시험·인증 협력 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L

속히 확보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가이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KTL이 수행 중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검증 및 실증형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65억 원(국비 100억 원 등)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기의 인도네시아 SNI 인증 국내 시험 기반 확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험인증 협력을 확대하여 '인증 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L은 이번 협력과 더불어 수코핀도의 아시아 인증기관 협의체(ANF) 가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 심사단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수코핀도 현지 평가를 수행했으며, 수코핀도는 오는 11월 베트남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ANF의 신규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 경제 권역 내 시험인증 상호 인정이 더욱 활발해져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L은 58개국 19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해외인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별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BKF+로 'K-푸드' 수출 돌파구 찾는다

45개국 바이어·국내기업 279곳 참여  
할랄권·신시장 바이어 비중 확대

2026년도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가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BKF+를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에 농산업 제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BKF+는 지난 12월에 제시된 '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한다. K-푸드 수출 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수출기업과의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025년 17.9%→2026년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025년 18.6%→2026년 21.1%)했다.

이날 BKF+ 행사장을 찾은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는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수출상담회와 후속 온라인 상담, 샘플 운송지원 등을 통해 K-푸드와 농산업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환율·운임 상승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수출바우처)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72억 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T,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확충

등록업체 이달 20일까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풀(후보군)' 등록업체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창고 확충을 도모한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민간창고 풀은 aT가 운영하는 비축기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발생에 대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 창고를 사전에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8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추, 무, 밀, 콩 등의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이다.

풀에 등록된 창고는 향후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수요 발생 시 입찰을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게 된다. 등록 대상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 등을 갖춘 민간 창고업자다. 신청 자격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 보유 ▲3년 이상의 농산물 저장 경력 ▲



비축농산물(참깨)을 보관 중인 민간창고. /aT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창고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 앞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점검과 시설 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결정한다. 풀에 등록된 업체는 향후 공사의 비축농산물 위탁보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국가수급 안전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54년 방치 광양 '옛 전매청' 9월 철거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 합의  
초등학교 인접, 안전·범죄 우려 해소

건축된 지 54년이 지나 지역의 '흉물'로 방치됐던 전라남도 광양시의 옛 전매청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우려하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물꼬를 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폐청사를 올해 9월까지 철거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대지면적 1491㎡)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사무실과 단층 관사는 과거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로 쓰이다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2014년 이후로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완전히 방치돼 왔다.

특히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리되지 않은 수목과 잡초가 무성해지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올해 2월 광양읍 주민 2359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주민들은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으나, 재산 관리 등의 이유로 해결

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거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후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양시는 철거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지 매각 전까지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향후 해당 부지를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보,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운영

22일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 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ESG 경영 가치를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무보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와 반부패 업무를 실전형 미션으로 풀어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주간 동안 무보 임직원들은 부서 단위로 ▲ E(환경) : 친환경 소품(텀

블러, 에코백 등) 사용 인증, ▲ S(사회공헌) : 사회공헌 활동 내역·참여율 점검, ▲ G(거버넌스) : 미션카드 내 반부패·소통강화 문구 숙지 등 세 가지 체험형 미션을 수행했다.

아울러 무보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당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이달 하순 여수서 'UN 기후주간' 개최

기후부, 각국 녹색에너지 추진책 공유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인 '녹색대 전환 국제주간'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0~25일 기간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녹색대 전환 국제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 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다.

녹색대 전환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 구조 전환을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 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 첫날인 20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마쓰오 타케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우고 아스투도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해 각국과 지역의 정책을 소개한다.

에너지 전환 장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